

총장칼럼

# 나의 총장 분투기

전방욱 |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원래 '총장 분투기'는 동경대 의대 연구자 출신인 구로키도 시오 선생이 중규모 대학인 기후대학의 학장(총장)으로 취임하여 법인화 전후의 대학 경영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겪은 경험들을 담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나는 강릉원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여 취임을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 권씩 증정했다. 그리고 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책을 나누어 드렸다.

"봉우리를 넘으면 그 다음에 또 가파른 봉우리가 다가왔다"라는 도시오 선생의 고백과 같이 내가 총장으로 취임한 지 7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와 마주칠 때가 많았다. 총장 취임 이전, 대학은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법한 총장 직선제 폐지와 공모제 시행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어 취임 초기의 어려운 짐을 덜어주려고 했으나, 외부의 환경은 신임총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법은 없었다.

취임한 지 1주일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전국국공립대 소속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앞으로 패소하게 되면 국립대학은 도산하고 말 것이라는 취지의 유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재정회계법 통과를 종용하고 나섰다. 1963년도부터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허용해 준 기성회비 제도가 흔들리게 되자 국립대학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국비와 기성회비를 교비로 통합하는 재정회계법을 도입할 호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동안 여러 번의 정치적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수면 아래로 숨은 상태이지만 별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 대학으로서는 가부간에 빨리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시행을 장담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제도도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없다면 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지난 학기 대학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대학운영비의 삭감을 감내하여야 하였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대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아니다. 오히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4년 동안 다른 사업비 예산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일례로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시설사업비는 2009년에 5,699억 원에서 2013년에는 2,276억 원으로 4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실정이다.

최근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의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강의시수를 6학점으로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강의시수의 감소는 시간강사와 시간강의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전임교수의 비율이 중요한 지표인데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는 떨어지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올해 6만 원으로, 또한 점차로 8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시간강사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정원과 배정정원의 차이만 인정하는 바람에 임금 인상 비용의 상당부분은 대학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었다. 등록금은 줄이면서 강사료는 증액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추가적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의무 채용도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오죽하면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포기까지 했을까 싶다. 결국 GDP 규모는

OECD 30개 국가 중 9위인데도 불구하고 21위에 불과한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국립대학의 재정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2011년은 대학들에게 특히 어려운 한 해였다. 구조조정중점추진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터진 한 해였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공모제와 구조조정중점추진대학 지정을 연계해 부당결부금 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지표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강원도의 종합 국립대학들은 모두 구조조정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 대학의 총 정원을 2020년까지 대학의 총 정원을 현재의 3분의 1 가량 줄여야 하는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교육부의 부실했던 고등교육정책의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게 지게 하는 것은 억울한 감이 있다. 1995년에 도입하여, 1996년에 시행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저출산,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을 감소 등 입학생 수효를 예측하지 못하고 부실한 대학들을 양산해냈고 그것이 현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준칙주의 이후에 설립한 대학들이 질 낮은 취업수준을 보여 교육부처가 질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힘써왔다는 지적도 있다.

급속한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어 대학은 그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해냈지만 경제계 인사들로부터는 대학이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은 근본적으로 미스매치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취업률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의 취업률은 지난해의 취업률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대학의 예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권장하고 대기업들이 고교졸업자에 쿼터를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학평가 지표인 취업률을 쉽게 높일 수 없는 지역 대학으로서서는 이중고를 겪는다. 더불어 산학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깊은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점차로 일반대학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방관하면서 한편으로는 산학협력을 통해 대다수의 일반대학을 전문대학, 산업대학화하려는 정책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그간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 등 여러 번의 국가 공모 사업을 지원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대학으로서 쉽사리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지표가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입생이나 재학생 총원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 모든 지표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하던 수도권 소위 유명대학, 지역의 대형대학, 군소 대학으로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각종 지표가 지원의 잣대가 된다면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뉘는 구호는 군소대학에게는 공염불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진정으로 지방대학을 살리고 싶다면 지표보다는 프로젝트의 참신성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1년 단위의 단기 재정 지원사업보다는 다년간의 재정 지원사업 비율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가하는 행정행위와 지역 대학을 살리자는 구호는 서로 배치되는 것 같다.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지방대학으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국가 공모 사업의 재정 규모가 작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수에 비하면 처리할 일거리가 많다는 점이었다. 대학운영성과목표제 계획서 제출, 공모제 규정 마련, 대학기관인증평가 등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만도 기획부서의 모든 인원이 만사를 제쳐두고 매달려야 할 만한 양의 일이다. 소규모 대학일수록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적는데 과중한 평가작업은 대학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기관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요컨대 내외부의 불리한 환경, 교육정책의 부조화,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강하고 슬기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 대학의 발전과 구성원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장은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초학문 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등 본연의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지나온 7개월이 7년처럼 생각되는 요즈음이다. 모쪼록 지치지 않고 위임받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싶다. 전국 대학의 총장들께서도 부디 힘 내시기를 바란다.

전방욱 총장은 제물포고, 서울대 식물학과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6년 3월 강릉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플로리다대 식물학과와 캘거리대 커뮤니케이션 문화학부 방문교수, 강릉대학교 교수회장, 지역국립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 강릉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전국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역임하였고 2012년 1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시민환경센터 이사장,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